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5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허 은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허 은·박미효의원 외 10명	발의년월일	2019.03.07.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 경 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연구 (안 제5조~제6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제15조)
- 라. 민간전문가 활용 (안 제16조)
- 마. 지원사업(안 제17조)
 -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및 생활안정 등

- 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8조)
- 사. 청년네트워크(안 제19조)
- 아.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안 제20조)
- 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안 제21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 다. 주관부서 : 가족정책과

II. 검토 의견

가. 제정 배경

-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과의 상충 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8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10%이며, 최근 5년간 청년층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사회진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결국 청년층의 주거문제, 비혼율과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 청년층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최근 5년간 전체 및 청년층 실업률 추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전체 실업률	3.5%	3.6%	3.7%	3.7%	4.0%
청년층 실업률	9.0%	9.1%	9.8%	9.8%	10.0%

자료 : 통계청(KOSIS 자료)

주)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

청년층은 15세~29세이하를 의미

-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층을 위한 지원 법률은 2016.5월부터 2018.5월까지 총 8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임.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 지자체와 다수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5.1.2일 『청년기본조례』 제정·시행하였고,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등 총 14개 자치구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
- 서초구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청년의 참여확대·능력개발·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안정 등 총 8가지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의 주요사항과 재원조달 방안,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안 제17조(지원사업)에 명시된 8가지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써 청년정책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청년정책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안 제6조)

-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3)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제15조)

-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세대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심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공무원과 청년정책 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청년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위원 인원을 ‘10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소관부서 검토안>

조항	조례안	소관부서 검토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u>3명</u>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u>2명</u>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u>10명</u>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u>2명</u>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u>3명</u>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4)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안 제17조)

- 구청장은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권리보호 등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분야별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

5)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청년네트워크(안 제18조~안 제19조)

-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특히 구청장이 청년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인 것으로 사료됨.

Ⅲ.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2. 소관부서 검토의견
3. 서초구 소속 위원회 현황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NO.75)

-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 ☐ 발의의원 : 허은, 박미효
- ☐ 소관부서 : 가족정책과
- ☐ 제 · 개정안의 주요내용
 -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4조)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연구 (안 제5조~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제15조)
 - 민간전문가 활용 (안 제16조)
 - 지원사업 (안 제17조)
 -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8조)
 - 청년네트워크 (안 제19조)
 -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보장 (안 제20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 (안 제21조~제24조)

【부서 검토의견】

- ☐ 입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서초구 전체 인구의 30.3%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행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저촉여부]
 - 현재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 저촉사항 없음

□ **재정부담 여부 [예산조치사항]**

- 향후 예산편성 필요

□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 예산확보 필요

□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세대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심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 제8조 제3항 1·2호와 3호 및 4호의 위원을 고르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청년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위원 인원 조정 필요
- 소관부서 검토안

조항	조문내용	소관부서 검토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 부서 종합의견 [대처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시 구 재정예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날로 심화되는 청년 문제에 대처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세대 간 균형 있는 청년정책 심의 및 전문성 확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 조정이 필요함

참고3 서초구 소속 위원회 현황

[34개부서, 87개 위원회]

(2019. 3월 기준)

연번	담당부서	위원회 명칭	설치년도
1	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1988
2	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1993
3	홍보담당관	정보화전략위원회	2002
4	홍보담당관	인터넷소통위원회	2011
5	홍보담당관	서초소식편집위원회	2012
6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1988
7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발전협의회	1988
8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1998
9	자치행정과	기부심사위원회	2007
10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2009
11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위원회	2013
12	교육체육과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1
13	교육체육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2003
14	교육체육과	교육발전협의회	2010
15	오-케이민원센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999
16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2001
17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위원회	2008
18	가족정책과	청소년참여위원회	2011
19	가족정책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2012
20	가족정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2014
21	가족정책과	서초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2015
22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1993
23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1994
24	지역경제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012
25	일자리과	생활임금위원회	2017
26	어르신행복과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2014
27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진흥기금운용위원회	1998
28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04
29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위원회	2000
30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001
31	사회복지과	모범장애인상심사위원회	2008

32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위원회	2009
33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1
34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5
35	여성보육과	보육정책위원회	2006
36	여성보육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2010
37	여성보육과	양성평등위원회	2015
38	여성보육과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7
39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2017
40	푸른환경과	환경정책위원회	2004
41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심의위원회	1991
42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06
43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평가위원회	2015
44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7
45	기획예산과	투자심사위원회	1999
46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2001
47	기획예산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06
48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7
49	기획예산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2008
50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12
51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위원회	2013
52	기획예산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2015
53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5
54	기획예산과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2015
55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2006
56	재무과	공유재산심의회	2006
57	재무과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2010
58	세무관리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2013
59	재산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1997
60	주거개선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2006
61	주거개선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010
6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1992
63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002
64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11
65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2001

66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위원회	2008
67	건축과	건축위원회	1962
68	공원녹지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2014
69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위원회	2016
70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990
71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2010
72	부동산정보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012
73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6
74	안전도시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007
75	도로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1999
76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1999
77	물관리과	소하천관리위원회	2015
78	교통행정과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1995
79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1995
80	교통행정과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2001
81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009
82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단속의견진술심의위원회	2011
83	건강정책과	구민건강위원회	2015
84	건강관리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2009
85	건강관리과	건강식당자문위원회	2013
86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0
87	의료지원과	저소득층아동치과치료지원지역협의체	2013